



[뉴스] 무역수지 낙담 연속 적자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52.25 (+0.75)	코스닥	807.61 (+3.99)
금리 (미국 3년)	3.081 (+0.072)	환율 (원/달러)	1304.00 (+4.90) (1일)

“국회 특위 구성... 반도체특별법 4일 발의”

금리 3%대 예고 집값하락 가속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
양향자 “국회차원 특위구성 촉구
정책대상 삼거나 일정지연 말아야
유관기관 많아 컨트롤타워 필요”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부여당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반도체 특위 회의와 당정협의회가 법안을 도출하는 ‘시즌 1’이었다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안 처리 과정을 ‘시즌 2’라고 소개했다.

당정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위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고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엔 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 원내지도부, 반도체 특위 소속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첨단분야의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도체 특위는 2일 기자회견

을 열어 법안 내용을 설명한 후 4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얼마만큼 야당과 비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추진할 수 있

는지 봐야할 것 같다. 여야나 국민들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거나 일정을 지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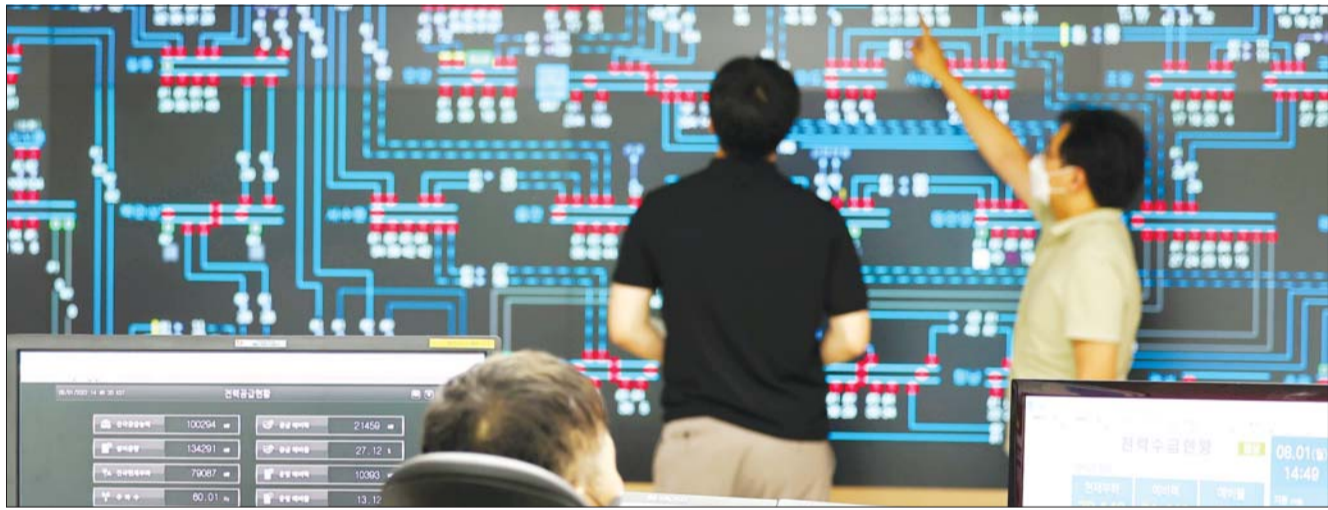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유관부처가 10개 정도 된다. 중차대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모든 부처에서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말을 했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선 로드맵을 세울 수 있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

는 김정호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용수 공급 문제로 14개월째 착공이 되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장 위치는 용인인데, 물을 모아서 공급하는 곳은 여주다. 용수 공급 문제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의 협업 체계 구축 ▲인력·산업 육성에 지방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 강화 ▲반도체 산업 피라미드 아랫단에 위치한 소재·장비 업체에도 지원책 마련 ▲칩4(한국·미국·대만·일본)동맹에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전력 수요 역대 최고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7월 월 평균 최대전력은 지난해 동월보다 1.0% 증가한 8만2007MW(메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시스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데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간 기준으로 9주 연속 하락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7월 2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05%)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0.01%) 한 뒤 9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하강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노원구(-0.13%→-0.15%)는 상계동 중소형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도봉구(-0.14%→-0.17%), 강북구(-0.13%→-0.14%) 등도 모두 낙폭이 커졌다.

美,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 단행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인상 유력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比 0.07% ↓ 하락 폭 전주보다 0.02%p 확대돼 노·도·강 등 외곽 하강곡선 가팔라 강남지역도 서초 제외 일제히 하락

‘강·서·송’(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지역은 서초구(0.01%)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다. 송파구(-0.02%→-0.04%)의 경우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가 심화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2%→-0.01%)도 하락 곡선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가격 하방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매수 관망세가 장기화되며 서울 집값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매수·매도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희망하는 매도가와 매수가 차이가 커 급매물을 제외하고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일부에선 수 천 만원에서 1 억원 이상 떨어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 1차’는 지난달 전용면적 32㎡가 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4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2면에 계속>
/김대환 기자 kdh@

통신요금 경쟁촉진 ‘유보신고제’, 유명무실 논란

‘SKT 5G 요금제’ 비판에도 승인 유보신고제 특성상 반려 거의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유보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2가지의 조건만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는 사실상 반려가 거의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이에 정치권, 시민단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이 거세지면서 반려를

검토했지만, 유보신고제의 특성상 이를 반려하기 어렵다고 보고 승인했다. 유보신고제는 기존 비슷한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위배될 때만 반려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SKT의 5G 중간요금제를 승인했고 국회측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시장점유율 1위 기간통신사업자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허용을 받도록 하는 요금인가제를 시행했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2020년에는 29년동안 시행하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암묵적 담합을 유도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가 그간 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제 반려 결정을 내린 건 2019년 5G(5세대) 출범을 앞두고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처음이다.

SKT의 이번 5G 중간요금제 처리 과정에서 한 차례는 반려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행하지 못했다. 흥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이어 “이번 판단의 첫째 기준은 부당한 요금 인상이 있었느냐, 둘째는 공정경쟁을 저해했느냐인데 첫째는 가격 증분과 데이터 증분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늘려서 데이터 제공량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둘째로 공정 경쟁 측면은 MNO(이동통신)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온라인 요금제보다 도매제공 요금은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공공기관, 핑계·남탓 이익집단화되는지 점검... 과감히 손댈것” /사진 뉴스시스
▲ 박용진 “이재명,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려 해”...李 “취지 왜곡”

▲ 한 총리, 박순애에 “취학연령 개편, 학부모 의견 반영” 지시
▲ 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 복송은 잘못된 결정” 재확인



▲ 8월 한미훈련서 수도권 확보 위한 대북 반격 숙달
▲ 병무청장, BTS 병역에 “여러 검토, 대체복무 틀안에서 보고있어” /사진 뉴스시스